

보험금 노리고 여친 살인미수 동창생 3명 “죄송”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보험금 수령인 자신으로 지정 후 범행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고등학교 동창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실질심사장)을 오간 박호(19)·유모(19)·임모(20)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사죄할 의사를 묻는 말에도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북면 한 아산에서 박씨의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A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 박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A씨를 만났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는 척하면서 지난 8월 말 A씨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을 들었다.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

박씨는 이후 동창인 유씨·임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박씨가 A씨를 펜션 인근 숲길로 보내면 유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임씨는 차량 도주를 도울 계획이었다.

이들은 3차레나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A씨와 함께 화순 한 아산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박씨는 “펜션 진입로 숲길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속인 뒤 A씨 혼자 걷음을 옮겼다.

A씨는 밤길에 무섭다며 펜션으로 돌아왔으나 박씨의 재촉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이후 유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고 몸 일부를 압박당했다. A씨는 힘겹게 유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 ‘외제 차량 할부금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10대 고교 동창생 3명이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받고 있다.

을 갖고 명품 의류 등을 사려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차량 고

박원순 유족 측 “인권위 결정에 성범죄자 낙인” 인권위 “소 부적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12일 첫 변론기일에서 박 전 시장 부인 측은 “행사사범 기능이 없는 인권위가 불완전한 절차로 사실상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인권위는 해당 결정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라며 강씨의 소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오전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전원위원회 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에 이 사건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서울시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강씨는 지난 4월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의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서 강씨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행사사범이 관이 아닌 인권위가 국민에 대해 불완전한 절차를 가지고 성범죄자라고 결정 내리고 발표를 했다. 중대한 위법적 행위이고 권리침해 행위”라며, “이 사건 결정으로 국민들은 행사사범 기관에 의해 박 전 시장이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된 것으로) 오해를 해 비난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은 형사재판의 위법·부당성을 다루는 항소심과 같이, 인권위 결정에 근거가 된 자료 조사 결과 등을 전부 공개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토대로 인권위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 등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해경 잠수 지시한 사업주 형사 입건

사인 ‘익사’로 잠정 결론...사업주 책임 규명 속도

전남 여수의 한 요트관광업체에서 일하다 잠수작업 중 숨진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군 사망사고와 관련, 수사에 나선 해경이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2일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한 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41분께 여수시 웅천동 한 요트 선착장에서 7급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현장 실습생인 홍군에게 지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역 한 특성화고등학교 해양레저관광과에 재학 중인 홍군을 취업 연계형 실습생으로 받아들여 실습협약에 없는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홍군은 올해 5월월부터 매주 주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업체에서

일했으나, 실습 협약서상 홍군의 업무 범위는 서빙·보트 선체 관리·조종·파손 부위 응급 처치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홍군은 업주 A씨의 지시를 받고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에 나섰으나, A씨 외에 다른 작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홍군이 헐거워진 잠수 장비를 재작용하는 과정에서 12kg의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아 의식을 잃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홍군의 사망 원인으로 1차 검사에서 ‘익사’로 잠정 확인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홍군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작업 투입 적정성 여부, 작업 중 안전규칙 위반 등을 두루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경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도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비롯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별철폐! 20일 총파업”

근속수당 인상·명절휴가비 차별금지 등 주장



12일 오전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외치며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광주시교육청과 임금교섭을 벌이는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들어간다.

연대회의는 1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섭타결을 호소해도 시교육청은 묵묵부답과 불성실 교섭

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불평등 사회양극화에 맞서 우리는 오늘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시작된 단체교섭을 1년 넘게 진행하는 동안 제대로 된 교섭안 하나없이 무조건 수용불가,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120일이 넘어가는 투쟁과 천막농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작은 합의마저 사측의 입맛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교육청의 무성의하고 차별적 태도로 교섭과 조정 모두 결렬됐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 20일 총파업을 선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차별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투표 대상 전국 조합원 9만 4773명 중 6만3054명이 총파업에 찬성(63.7%)했다. 광주 연대회의의 조합원은 3800명에 이른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